



유통 (Positive)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 관련 코멘트

▶ Analyst 이진협 jinhyeob.lee@hanwha.com 3772-7638

다시금 부각된 규제 리스크

전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민주당(여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달되며, 유통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해당 기사는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국회에 발의했던 유통업 관련 여러 법안들은 취합하여, 현재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요 논조로 한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 공약에 대형마트 관련 공약이 실리지 않았다. 또한 아직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조직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신 정부의 우선 순위에 놓일 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금번 이슈가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은 송재봉 의원안과 오세희 의원안 총 2건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발의된 이후, 11월 소관위에 상정된 이후 계류 중에 있다. 법안 제출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기에 상황이 변화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시, 영향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존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마트는 할인점 133개점 중 현재 53개점(40%)이 평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총 110개점 중 31개점(28%)이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어 평일 의무휴업 점포가 모두 일요일에 쉼 경우, 이마트는 약 -0.8%, 롯데마트는 약 -0.6%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다. 영업이익단의 영향은 연간 100~200억원 내외일 것인 데,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 수당 등 인건비 감소 영향 등을 고려 시 그 영향이 더욱 줄어들겠다.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이다. 현재 폐점이 확정된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으로 총 36개 점포(전체 중 약 29%)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 상황이다. 만일 총 36개점이 폐점될 경우,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수 있겠다. 인근 경쟁점이 이중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0억원의 매출 증분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트에는 +6%, 롯데마트에는 +11%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 지난 9월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오세희 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4253	2024-09-25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가 대거 진출해 중소유통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중소유통업체를 대표할 뿐 그 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임주업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의회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3항 신설 등).

감추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6	2024-11-20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요약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이재명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관련 공약

	내용
목 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이행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폭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실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자료: 공정선거관리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6월 1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진협)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9%	9.1%	0.0%	100.0%